

『노동 계급』 그룹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와 민중 민주주의

- I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이진경 : 변호인 심문 중에서)
- II 민중 민주주의 변혁론(안민규 : 변호인 심문 중에서)

『노동 계급』 그룹

◇활동 개요◇

국가 안전 기획부는 1990년 2월 12일 『노동 계급』의 활동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987년 5월부터 1989년 4월까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해 혁명 투쟁을 수행할 조직을 결성하기로 모의하고, 대학 운동권 출신과 전국 노동 현장에서 활동중인 사람 등 50여 명을 규합하여, 1989년 5월 “노동 계급”을 결성하였으며, 조직 결성 후 조직원 50여 명을 서울·인천·성남·부산·울산·대구 등 전국 노동 현장과 서울 대학교 등 학원에 침투시켜 의식화 투쟁을 선동하고 조직을 확산해 왔으며, 대학 신문과 잡지 등에 민중 민주주의 혁명 이론을 찬양하는 글을 기고해 왔다.”

“노동 계급”은 반체 반독점 민중 민주주의 변혁론에 입각하여 노동 해방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노동자 정치 조직으로서, 1988년 『주체 시대의 종말』을

펴낸 이후, 1989년 『노동 계급』이라는 제호의 기관지를 5호까지 발간하였다.

◇사건 개요◇

1990년 1월 15일, 박태호 씨가 국가 안전 기획부에 연행되어 17일, 국가 보안법 위반(이적 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구속되었다. 23일에는 안민규 씨가 연행되어 구속되었고, 박태호 씨에게 이적 단체 구성 혐의가 추가되었다.

박태호 씨 구속 때 문제를 삼은 표현물은 합법 출판물을 통해 널리 읽혀졌던 『사회 구성체론과 사회 과학 방법론』(1987), 『현실과 과학』 및 『대학 신문』 등에 실린 글이었기에 충격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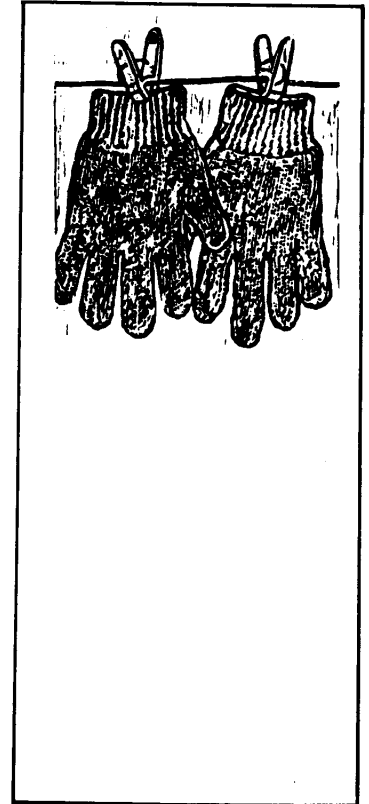
더욱이 2월 13일 안기부의 수사 발표에서는 사건을 확대시키기 위해, 안민규 씨를 총책으로 만들어내고,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을 입건시켜 서울 지역 총책으로 앉히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

위 두 사람은 분리 재판을 거부하고 병합 심리를 요청하여 관철시켰으며, 그들이 지향했던 민중 민주주의적 변혁과 노동 해방이 무엇이며 왜 필연적인지를 재판장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두 사람 모두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청주 교도소와 대전 교도소에 각각 수감되어 있다.

◇약력◇

- 박태호(필명 : 이진경)(29세)
노동 운동가. 『사회 구성체론과 사회 과학 방법론』, 『주체 사상 비판』(1·2) 등의 저서와 『현실과 과학』 등의 잡지, 『대학 신문』 등에 다수의 논문 발표. 『노동 계급』에 다수의 글 집필.
- 안민규(28세)
노동 운동가.
『노동 계급』 조직 활동.



I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

사회 구성체론이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웠다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도 노예제를 비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앙클 톰의 이야기로 유명한 1700년대~1800년대 미국에서 노예 제도는 법으로 보장되었었고, 법과 제도는 도망치는 노예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에 대해 반인륜적인 법이니, 반도덕적인 사람이니 하는 비난은 무용하고 공허한 일일 것입니다. 노예가 말할 줄 아는 생산 수단으로서 존재하던 시대에 노예법을 비난하는 것은 사실 우스운 일입니다.

이처럼 상이한 시대의 법이나 정치, 도덕은 어떤 추상적 도덕이나 이상에 의해 판단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회의 지배적인 생산 관계, 경제 구조에 의해 규정되고 변화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회의 전체를 올바르게 일관되게 이해하려면 그 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생산 양식, 생산 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하고 그에 기초해 다른 현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은 유물론적 역사관의 요체이며, 것처럼 생산 관계를 토대로 한 사회 전체를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개념이 사회 구성체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 시대에는 당연하게 여겨지며 상존하던 신분 제도가 현재 한국 사회에선 부당하게 여겨지며 존재하지 않습



모든 법이나 정치, 도덕은 그 사회의 생산 관계에 의해 규정되고 변화해 왔습니다.

사회 구성체론은 한 사회의 변화를 생산 수단 소유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이다.

니다. 그것은 조선 시대는 농노 또는 소작인이 경제외적 강제를 통해 복역하거나 소작하는 봉건적 생산 관계에 기초한 봉건적 사회 구성체였던 반면, 현재 한국 사회는 생산 수단을 갖지 못한 노동자들을 경제적 계약만으로도 생산할 수 있는 관계에 기초한 자본주의 사회 구성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체도의 변화, 도덕의 변화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사회의 변화를 생산 수단 소유 관계를 중심으로 통일적이고 동태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이 바로 사회 구성체론입니다. 그리고 사회 구성체가 특정한 시기, 조건에서 보여주는 특수성을 사회 성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나라는 1920년대 이후 자본주의 사회 구성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특수성에 따라 일제 시대는 식민지 반봉건 사회로 파악되고 현대 한국 사회의 성격은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이하 '신식국독자') 사회로 파악됩니다.

남한 사회의 현실과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

1990년 들어서만도 2월~4월 사이에 무려 15명의 노동자와 도시 빈민이 치솟는 집세에 목이 달려 죽었습니다. 지난 3월 23일 용접공인 김선국(33) 씨는 “살기 힘들어 먼저 간다. 미안하다”는 유서와 가족을 남긴 채 한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는 제작년 12월 말부터 부천의 한 공장에서 일당 7,300원을 받으며 일해 왔다고 합니다. 지난 4월 10일에는 엄승욱(40) 씨가 오른 집세를 마련치 못해 비판, 자살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유서를 남겼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가난이 나에게 물려졌고 기적이 없는 한 자식들에게도 물려지게 될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이 끝날 조짐이 없다.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내집 마련의

꿈은 고사하고 매년 오르는 집세도 충당할 수 없는 서민의 비애를 자식들에게는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노총의 계산에 따르면 87년 당시 2인 가족의 최소 생계비는 396,699원, 4인 가족의 그것은 671,828원입니다. 그러나 87년 노총의 통계에 따르면 144,000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100만 명이 넘으며 남자 1인의 최소 생계비인 277,557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전체의 66.5%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집은 커녕 집세 걱정이나 안한다던 어떻게든 살아볼 텐데 하고 한탄하게 생겼습니다. 집은 커녕 빚이나 가난을 안 물려 주고 죽을 수 있다면 하는 게 노동자와 민중의 바람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보고 싶은 딸내미 생각을 잠시 보류한 채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잔업을 하고 특근을 합니다. 철야는 아프리카의 어디 후진국에서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인간은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먹는 것일진대 먹기 위해 일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빼면 남는 시간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반면 노동자들의 점심값으로 300~400원을 책정해 놓은 자본가는 1인당 3만 원 하는 음식점에서 품위 있는 식사를 합니다. 하루 술값으로 50만 원~100만 원을 씩습니다. 가족의 명의로 땅과 아파트를 얻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남의 이름을 빌어 그걸 사들입니다. 일 년도 안돼 그것은 몇 배의 값으로 오릅니다. 실제로 30대 재벌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13조 원에 이르며 89년 경제 위기가 어떻고 물가, 임금이 어떻고 하면서 한 해 동안 매입한 부동산은 3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얼마전 대기업을 자진 신고한 3자 명의 부동산만도 1,600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압구정동의 고급 양식당에선 국민 학생들이 음식을 먹고 자기앞 수표로 식대를 치른다고 합니다. 1억을 호가하는 외제차, 천만 원을 넘어서는 소파와 카펫, 수백만 원도 넘는 냉장고 등등…….

내 집은 커녕 빚이나 가난을 안 물려 주고 죽을 수 있는 게 노동자의 꿈

노동자들 점심값으로는 300~400원을 책정해 놓고 자본가는 3만원짜리 '품위 있는' 식사를 하고



자본가의 치마폭에
싸여 사는 정부가
바라는 세상은
-자본가의 천국,
노동자의 지옥?

이렇습니다. 노동자 계급이나 민중들의 생활과 자본가 계급, 특히 대독점 부르조아지의 생활은 이토록 대조적입니다. 이견 시인의 입을 빌어도 더이상 과장될 수 없을 정도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노동자의 계급이나 무능력과 자본가의 근면함이나 유능함에 기인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대조를 이루는 부르조아의 부는 바로 그 반대편에 있는 노동하는 자의 빈곤에 연원합니다.

한편 정부는 어떠합니까? 물가 인상의 주범이 임금 인상이라면서 한 자릿수 물가를 강요하던 정부는 침체한 증권 시장을 위해 수조 원의 돈을 풀었고 오르는 물가에도 불구하고 기업용 여신을 확대하고 금리를 내렸습니다. 노동 운동을 해보겠다고 취업한 노동자들은 소위 '위장 취업'이라고 속아내어 구속시키면서도 금융 거래를 실명제로 하자는 자신의 제안도 독점 자본의 반대로 거둬 포기했습니다. 노동 단체에 도움을 청하는 것은 3자 개입이라는 미명으로 막으면서 노동 현장마다 경찰, 안기부, 노동부가 개입하여 처리합니다. 정당하고 적법한 노동 쟁의 조차 업주의 112 신고 하나면 진압, 연행, 구속하면서도 자본가의 불법 폐업이나 도피는 나몰라라 방조합니다. 89년 상반기 자본가의 부당 노동 행위는 1,492건이었으나 그로 인해 구속된 자본가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노협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 노동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는 업무 조사를 벌이면서도 의당 시행했어야 할 감사원의 감사조차 재벌의 로비 앞에서 중단되고, 그것을 고백한 성실한 공무원이 구속되었습니다. 노동자에게는 파업 기금은 커녕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유례 없는 규칙을 강요하면서 자본가들이나 투기업자의 무노동 고이윤에 대해선 만들었던 법안까지 포기해 가면서 보장해 줍니다.

노동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자본가에게는
무노동 고임금?



그렇습니다. 이것이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대립적 현실입니다. 국가까지 끼어들면 이런 대립은 더욱더 적대적

양상을 분명히 합니다. 국가는 부르조아지 특히 독점 자본가에 대한 무한정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노동 계급의 정당하고 소박한 요구에 대해서는 극도의 탄압을 자행합니다.

이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회의 현실이고 바로 우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도 한 현실입니다. 동시에 누가 보아도 대립적이고 모순적인 현실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것처럼 대립적·모순적인 현실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여 발생하고 존재하는 것인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는 분명 부당한 현실, 고쳐져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도 과학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는 이론은 바로 이런 모순에 가득 찬 현실을 그 분석의 출발점으로 합니다.

자본가 계급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노동자 계급에게는
무한한 저주를?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론은
바로 이러한
모순에 찬
이 현실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한다.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논리 구조와 남한 사회

남한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다.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노총이나 경제 기획원의 관리,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검사, 판사 모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한 노-자의 모순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사회,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로 특징지어지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남한 사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남한 자본주의가 갖는 특수성을 보아야 합니다. 신식국 독자는 남한의 자본주의의 특수성을 자본주의의 보편적 발전 법칙에 근거해서 파악하는 개념입니다.

자본주의의 특수성을 본다는 것은 자본의 재생산 구조, 축적 구조를 보는 것이며, 또한 특수한 지배 계급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즉 남한에서 자본 및 자본주의가 재생산되는 데서

신식국독자는
남한 자본주의의
특수성을
자본주의의
보편적 발전 법칙에
근거해서 파악하는
개념

보이는 특수성이 바로 신식국독자입니다.

남한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계급은 독점 자본가 계급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상품의
대부분에는
독점자본가의
상표가 붙어 있다.

그들은 현재 남한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한내 부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미료를 사려면 미원 아니면 제일 제당과 대면해야 합니다. 제가 입고 있는 내의나 변호사, 판사, 검사의 내의들은 볼 것도 없이 백양, 쌍방울, 태창에서 만든 것입니다. 자동차를 사려면, 텔레비전이나 가스레인을 사려면, 철강을 구입하려면 누구든 독점 자본과 대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 자동차 하나가 문을 닫으면 수백 개의 하청 업체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는 모르나 그들 독점 자본자들이 임금 투쟁 진압을 요청하면 전국의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진압해 줍니다. 그들 독점 자본가가 반대하면 토지 공개념이니 금융 실명제니 하는 법안들은 모두 휴지 조각이 되어 버립니다. 30대 재벌 아니 10대 재벌, 아니 하나의 재벌이 총폐업이라도 하는 날에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마비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남한 사회는
독점 자본주의
사회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남한의 자본주의는 독점 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독점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들 독점 자본가 계급은 '해방' 후 급속히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일제가 남기고 간 귀속 재산을 불하받고 국가의 엄청난 특혜를 받으면서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1960년대 이래 계속되어 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사실상 '독점 자본 개발 5개년 계획'이었습니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독점 자본 육성
5개년 계획이다.

그런데 자본이 재생산되고 자본주의가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 기술과 시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 시장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독점 자본의 국가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차관을 끌어다 대 주었습니다. 엄청난 규모로 급속히 증가한 외채가 바로 그것입니다. 최근에 와선 자본 시장 개방을 통해 직접 투자 등으로 직접 조달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편, 70년대 들어 본격화된 과학 기술 혁명은 첨단 기술의 개발이나 이용 없이 독점 자본의 축적이 곤란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기술은 제국주의 국제 독점체가 대부분 독점한 채 이윤에 덧붙여 놓은 기술 사용료로 착취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DC의 생산 그 자체를 지배할 수 있는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독점체들은 독자적 기술 개발보다는 대부분 비싼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기술을 수입해 사용합니다. 이는 기술 종속이 독점 자본 축적의 주요 조건으로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남한 경제가 미국, 일본 등 외국 시장에 의존하는 정도는 수출입을 합해 70%를 넘습니다. 이는 원료, 생산 수단 구매 및 생산물 판매에서 예측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미국에서 자국 시장 보호라는 협박성 발언만 던져도 남한의 독점 자본이 긴장하여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남한 자본주의의
특수성-국제 독점체에
기술·금융·시장
종속이 남한 독점 자본의
재생산을 위한
내적 조건이 되었다.

결국 기술적, 금융적 및 시장의 종속이 남한 독점 자본주의의 축적 재생산을 위한 내적 조건으로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치된 이해 관계에 따라 그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 주는 남한의 국가 권력이 남한 자본주의의 재생산에 필수적인 요소로 되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사회를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남한 자본주의의 특수성을 표현해 줍니다.

민중의 반자본·반외세 투쟁은 왜 불가피한가

앞서 저는 남한 사회가 신식국독자 사회라고 했습니다. 이 신식국독자 체제는 전국민의 5%에도 못미치는 극소수 독점 자본가가 대다수의 민중을 착취하고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즉

신식국독자 체제는 다수에 대한 소수의 지배 체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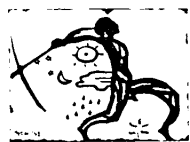
다수자에 대한 소수자의 지배 체제입니다. 그런데 소수자가 다수자를 지배하기 위해선 일반적으로 거대한 폭력과 관료 기구, 이데올로기 기구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수자의 지배는 다수자의 저항과 요구를 감당해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올 임금 인상 한 자리 수용에서 보여주듯이 남한에서는 노동자 계급이나 민중의 대부분에 대해 전면적 개량화 조치를 취할 여지가 별로 없는데, 그런 사회에선 위로부터 지배자 스스로가 나서서 민중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민주화하는 경우가 역사상 전무합니다.

전면적 개량화가 불가능한 남한에서 소수 지배 계급은 폭력을 통해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 계급 혹은 민중의 경제적, 정치적 요구에 대해서는 언제나 폭력적 방법으로 진압, 억압해 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파업 4일만에 전국의 정보 기구와 경찰을 총동원해 진압한 현대 중공업의 파업은 그 같은 사태의 전형적 예증입니다.

물론 소수자가 다수자를 위해 자신의 지배를 포기한다면 투쟁은 있을 필요가 없으며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걸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민중들의 저항을 분쇄하기 위해 최대한의 폭력과 억압을 계속할 것입니다.

착취와 억압을 위해 다수가 눌러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노동자 계급과 민중에 대해 가해지는 착취와 수탈을 제거하고 소수자의 지배와 억압을 극복하기 위해선 그저 눈치만 보고 있을 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 사회인 남한의 발전 방향

현재에 대한 과학적 분석은 미래의 변화 방향에 대한 상을

이미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적극적으로 그러려고 해야 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신식국독자론에 이미 남한 사회의 새로운 발전 방향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반 다수자에 대한 소수자의 지배, 독재를 폐지하고 다수자의 이익이 보장되고 실현되는 사회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중들의 모든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하는 민중 권력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노동자 계급과 민중을 착취하는 체도를 철폐하고, 민중의 이익이 실현되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사회 제도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선 독점 자본을 국유화해야 합니다. 그 경우 국유화된 독점 자본은 민중의 이익 실현을 위한 경제적 기초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반면 독점 자본이 그대로 소수의 소유로 남겨진다면 그것은 소수의 지배를 철폐하고 민중의 이익 실현을 위한 조처에 반대하고 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차 반복되고 있는 경제 개발 계획이 상징하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독점 자본을 중심으로 한 경제의 계획화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시장이나 상품 경제의 제거를 뜻한다는 터무니없는 악선동에 현혹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가능한가? 그 현실적 기초가 있는가? 우리는 독점 자본의 강화 속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공업과 사회화된 생산, 그리고 지속적으로 존속해 온 국가적 회계·통제 장치 속에서 그 같은 사회의 현실적 기초를 봅니다.

경제 발전의 성과를 독점의 강화와 독점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독점적 소유 관계만 제거된다면 생산력 발전의 모든 성과가 전체 민중을 위해 사용되는 사회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흔히 민중 민주주의 사회라고 부릅니다. 이 같은 민중 민주주의 사회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민중에 의한, 민중

민중 착취 체도를 철폐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 제도 수립이 과제

다수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독점 자본을 국유화해야

이러한 민중 민주주의 사회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이다.

을 위한, 민중의 정치가 실현되는 사회일 것입니다.

왜 폭력적, 비합법적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가

폭력, 그것은 애초부터 없었다면 좋았을, 그러한 것입니다. 폭력이 야기하는 고통, 그것은 폭력을 대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아는 것일 것입니다. 구사대에게 한번 맞아 보고 경찰에게 터져 본 사람이라면 더욱더 잘 압니다. 따라서 노동자 계급이나 민중에게 폭력은 지겹도록 증오스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선 반공 이데올로기가 폭도로서 비난해마지 않는 마르크스나 레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레닌은 일찍이 쓴 글에서 “노동자 계급은 할 수만 있다면 평화적 권력 장악을 택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파업 한 번 해 본 사람, 시위 한 번 해 본 사람이라면 구사대, 백골단, 경찰 등 지배 계급의 조직된 폭력 앞에서 비폭력이란 말이 얼마나 무기력하며 무의미한지 잘 압니다. 올 봄 신문을 장식했던 현대 중공업과 케이비에스 사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자가 진정 누구인지, 그 경우 과연 비폭력이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것인지는 분명합니다.

합법적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합법적 방법이나 활동이 주는 부담과 고통을 익히 잘 알고 있기에 노동자 계급과 민중은 가능한 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합법의 영역이 아무것도 줄 수 없다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70년대의 민주 노조 운동이나 80년대의 노동 운동조차 합법의 영역을 고집했다면 아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89년 상반기의 노동쟁의 1,400여 건 중 70%인 980여 건이 불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흔히 법은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금, 노조의 문제를 다루는 쟁의의 70%가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이는 오히

려 법이 상식이나 일반적 상황과 괴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상 현행 노동법대로라면 합법적 쟁의 자체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이며, 또한 얼마전 동아 일보와 고려 대학교 노동 문제 연구소가 개최한 ‘노사 안정과 노동법’이란 심포지움에서도 지적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노동자 계급의 이익 실현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노사 안정·산업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다고 했지만 말입니다. 일체의 노동 운동 조직이나 우리같이 소규모 정치 조직도 이렇게 탄압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냉엄한 현실입니다.

또 하나의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87~88년 노동자 계급은 노동법 개정 투쟁을 벌였으며, 그것을 통해 결국 노동법 개정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노태우의 거부권으로 인해 그 법은 휴지 조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중 민주주의·노동 해방을 평화적 합법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제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평화적·합법적 방법에 대해 포기하거나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결사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으며, 의회를 염두에 둔 정치 활동을 하려 합니다. 국가 보안법 철폐 투쟁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그런 미련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후로도 우리는 평화적·합법적 수단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악법 앞에서 쥐구멍보다도 좁은 현행 합법의 틀 안에 주저앉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머지않아 합법적·평화적 방법에 대한 전면 부정으로 나갈 중간 정거장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당한 활동과 사상이 합법적·평화적으로

수많은 고통과 노력으로 쟁취해낸 노동법 개정이 노태우의 거부권 행사로 휴지조각이 되어 버리는 이 현실에서 합법적으로 노동 해방, 민중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 평화적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그렇다고 악법 앞에서 주저앉지는 않을 것이다. 나아가 폭력과 비합법을 강요하는 조건들을 없애는 데 매진할 것이다.

“노동 계급은 할 수만 있다면 평화적으로 권력을 잡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현행 노동법대로라면 어떠한 합법적 쟁의 행위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폭력과 비합법을 강요받게 되는 조건 자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스런 폭력을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내 저술 활동이 '이적 행위'라는 검찰의 견해에 대하여

1) "결과적으로 북한에 동조한 이적 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동조·이적 행위의 전제는 그 대상에 대한 동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의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 동조·이적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북한의 주체 사상 전체 체계와 북한의 전략 전술 전반에 걸쳐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가 어째서 동조·이적 행위입니까? 비판도 동조의 한 형태입니까? 이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하는 한, 주체 사상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하는 한 우리의 활동 어느것도 동조·이적이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를 주장하기에 동조·이적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북한=사회주의, 우리=사회주의, 그러므로 북한=우리. 만약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삼단 논법을 적용한다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차우세스쿠=사회주의, 차우세스쿠 기소 검사=사회주의, 그러므로 차우세스쿠를 기소해서 사형을 구형한 검사 역시 차우세스쿠 정부에 대한 동조·이적 행위자입니까? 이 논법에서 문제는 차우세스쿠의 사회주의와 그를 기소한 검사의 사회주의가 동일한 것이 아니며, 때로는 대립적인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사회주의",

"우리=사회주의", 그러므로 "북한=우리"식의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3) "자유 민주주의 부정=동조·이적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 혹은 자유주의는 선택성을 전제로 합니다. 즉 자기나름의 사상이나 견해, 주장, 직업, 활동 방식 등등에 대한 선택 가능성, 선택의 자유가 배제된 제도는 자유 민주주의라는 이름에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다양한 계급과 계층, 때로는 서로 적대적인 이해 관계를 갖는 계급, 계층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즉, 다양한, 서로 적대적으로 대립하기도 하는 계급이 존재하는 상이한 사상, 견해를 가지고 그것을 출판하며 그에 입각한 조직을 결성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 원리인 자유 민주주의는 그러한 선택의 자유를 원리적으로 보장합니다. 모든 자본주의 사회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사상·집회·출판·결사의 자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프랑스 혁명의 삼색기는 자본주의 사회의 그 원리를 집약해서 보여줍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를 단죄하는 데에 바로 그와 같은 자유 민주주의가 이용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폐기하는 것입니다. 혹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선택의 자유, 자유 민주주의는 제한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한다 해도 바로 그 주장은 자유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제한하고 폐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부정, 제한의 조건에 대해서 언급할 뿐입니다. 따라서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는 비난은 그런 논리의 주장자가 먼저 받아야 합니다.

한편, 그런 식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제한하는 경우가 다른 나라에도 없진 않았습니. 명분이 남북 긴장 관계가 됐든 소련의 위협이나 국내 공산주의자의 위협이 됐든, 혹은 백인의



소수 지배를 위협하는 것이 됐든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히틀러의 독일이나 뭇솔리니의 이탈리아, 그리고 아파르트헤이트로 악명 높은 남아 공화국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유보 조항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모두는 한결같이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파시스트입니다. 바로 이들 파시스트야말로 '선택 가능성이 배제된 자유 민주주의'라는 자가 당착을 강요하며 그것이 이름으로 민중의 다양한 이해와 운동을 억압해 왔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 가능성 없는 자유 민주주의', '자유 없는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에 대한 동조자의 행위가 아니라 진실된 의미에서 자유와 자유 민주주의를 옹호하려는 모든 사람의 행위입니다. 시인 김수영이 '자유에는 피 냄새가 섞여 있다'고 읊었던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보이듯이 '자유 없는 자유 민주주의'라는 파시스트적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그런 거짓된 자유 민주주의를 철폐시켰습니다. 이제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국가 보안법을 철폐하는 것, 그것은 자유 민주주의의 부정이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를 파시스트의 손에서 되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함으로써 북한에 동조·이적 행위를 했다는 것 역시 성립되지 않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반대로 자유민주주의자들도 동조하는

II 민중 민주주의의 변혁론

민중 민주주의의 변혁론의 역사적 배경과 근거

어떤 것의 본질을 정확히 알려면 그것이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 왔는가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백번 타당한 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써 국가 보안법의 본질은 그것이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 왔는가를 보면 너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말하는 민중 민주주의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민중 민주주의란 60년대 이래의 민주화 투쟁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온 것입니다. 즉 60년대 이래의 민주화 투쟁이 민중 민주주의의 내용을 구성하게 된 계기인 것입니다.

1960년 4·19를 정점으로 전면화된 민주화 투쟁은 박정희 정권에 대해 자유와 민주, 즉 "자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모든 투쟁의 장에는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깃발되어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 11월 13일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 자살은 그 동안의 투쟁이 갖는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즉 민주주의의 가치에 자유를 써넣고 투쟁했으나 그 사이 대다수 노동자와 민중은 극도로 저열한 경제 조건과 억압 속에서 생존

우리의 민중 민주주의의 역사는 60년대 이래의 민주화 투쟁과 역사를 같이 합니다.

전태일 동지의 위협마저 느끼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전태일 동지
 분신 자살은 의 분신 자살로 인해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노동자 계급과 다른 한편 1972년의 “유신”은 그 동안의 투쟁이 얼마나 뿌리
 민중의 인간적인 삶과 민주적 없는 것이었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권리 보장 문제를 이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노동자 계급과 민중의 인간
 제기하였다. 적인 삶을 보장하고 그들의 민주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리하여 70년대 운동은 민중을 위한, 민중과 함께 하는
 투쟁으로 변모하게 되었음을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
 니다. 이는 민중 민주주의의 가장 근접적인 문제 의식과 내용을
 규정했던 것입니다.

80년 광주 민중 항쟁은 막연한 민중 투쟁이 아닌, 민중 스스로 권력을 장악하여
 독점 자본가 계급의 저항을 분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그런데 1980년 5·17과 광주 항쟁은 막연하게 민중을 위해
 민중과 하나되어 하는 투쟁만으로는 대다수 민중의 이익이
 보장되고 실현되는 사회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
 니다. 즉 민중 스스로 권력을 잡고 통제할 수 없다면 민중 민주
 주의에 대한 요구는 개별적인 청원 운동에 머물 수조차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민중의 권리가 전면적으로
 실현된 사회를 위해서는 민중이 권력을 잡아야 하며 민중 권력
 에 반대하는 독점 자본가 계급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조치
 들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중 민주주의의 내용으로 들어
 오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운동권”에서 대부분 채택하
 고 있는 민중 민주주의의 사실 내용입니다.

결국 이상에서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민중 민주주의나
 민중 민주주의 변혁론은 이 같은 남한 민중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것에 이론적 표현을
 명확하게 부여한 것은 최근의 일이나 그것은 기존의 투쟁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온 민중 민주주의의 이론적 의미를 분명
 히 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
 고 그것은 남한 민중의 자연 발생적 투쟁 속에서 형성된 것이

기에 더욱더 현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에서도 우리의 민중 민주주의 (변혁)론
 은 북한에서 말하는 남한 전략이나 주장과는 상이한 역사와
 전통,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중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우리의 견해를 북한에
 대한 동조·이적 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처럼
 민중 민주주의
 변혁론은
 남한 민중의
 투쟁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민중 민주주의 사회란

민중 민주주의 사회의 상은 당면한 남한 사회 변혁의 방향으
 로 우리가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경제
 적으로는 독점 자본의 몰수와 이의 국유화, 정치적으로는 노동
 자 계급을 비롯한 다수 민중의 권력 수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
 다.

이의 구체적 내용은 우리 강령에 그 대강이 나와 있는데,
 추려서 소개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

1. 제국주의와 독점 자본을 제외한 각계 각층의 대표로 구성되
 는 회의에 모든 국가 권력을 집중시킵니다.
2. 민중 민주주의 공화국은 제국주의와 독점 자본 세력을 제외
 한 모든 계급 계층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합니다.
3. 외세의 모든 정치 군사적 간섭을 폐지합니다.
4. 언론, 집회, 시위, 결사, 출판, 사상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
 고 성, 종교, 신분, 연령에 따른 모든 사회적 차별을 완전히
 폐지하며 고문 등 모든 인권에 대한 침해를 완전히 금지시킵
 니다.

제국주의와
 독점 자본 세력을
 제외한 모든
 계급의
 정치적 자유 보장 외세 배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사회적 차별 폐지

경제

- 1. 제국주의 자본과 독점 자본 및 주요 기간 산업을 국유화하며
주요 산업 국유화 국가 경제 계획의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 2. 불평등한 경제 협정, 외채 등 제국주의와의 불평등한 경제
대외적 평등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이들의 경제적 침략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 3. 완전한 누진적 조세 제도를 확립하고 부가 가치세 등의 간접
조세 형평 세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 4. 중소 자본가와 도시의 소생자 및 농민에 대해서는 소유권과
중소자본가와 소생산자 보호 생산 및 영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문화 및 복지

- 1. 전반적인 무상, 의무의 공교육을 실시합니다.
전반적인 의무 교육
- 2. 지배 계급적 향락 문화를 일소하고 전체 근로 민중의 이익을
향락 문화 일소 대변하는 문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 3. 완전한 1가구 1주택을 실현합니다.
'1가구 1주택 실현
- 4. 완전 고용제를 실현하고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생활을 보장합니다.
완전 고용 실현
- 5. 무상으로 전국민에 대한 의료 보험제를 실시합니다. 등.
국민 의료제 실시

노동자 계급

- 1. 1일 8시간 주 44시간 노동제를 완전하게 실시하고 야간
주 44시간 노동제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 2. 적절한 수준의 경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 임금을 보장
생활 임금 보장 합니다.
- 3. 심신을 황폐화시키는 고강도 노동을 금지합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장
- 4. 노동 3권 및 파업의 자유와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합니
다.
- 5. 노동자들이 공장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공장의 전반적인
공장 위원회를 통한 운영 참가

운영에 참여한다.

- 6.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한 고용 노동을 금지합니다. 등. 미성년자 노동 금지

농민

- 1. 농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비농민 혹은 독점 자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는 무상으로 몰수하여 국유화합니다. 독점 자본 몰수
- 2.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임야는 소유권을 인정합니
다. 농민의 소유권 인정
- 3. 농산물의 불평등한 가격 체제를 타파하고 적절한 가격을
보장합니다.
- 4. 농가 부채를 전액 탕감합니다. 등. 농가 부채 탕감

중소 자본가

- 1. 소생산자와 소상공인 및 어민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영업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소생산자 보호
- 2. 몰락한 소생산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완전 고용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완전 고용 보장
- 3. 중간층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현직을 보장합니다.
- 4. 중소 자본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영업의 자유를 보장합니
다. 중소 자본가 보호

이상의 내용에서도 이미 나온 바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민중 민주주의 사회는 사적 소유가 완전히 철폐된 사회가 아니
라 제국주의와 독점 자본의 소유 이외의 소유에 대해서는 인정
을 하며 또한 정치적으로는 노동자 계급을 비롯한 다수 민중의
권력을 목표로 하므로 이 점에서 사적 소유의 완전 철폐와
노동 계급의 권력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사회는 차이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주의 사회와는 다르다

『노동 계급』 발간 취지

우리가 “노동 계급”을 발간했던 당시는 자신의 생존권과 인간적인 권리를 되찾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국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움직임은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의 흐름과 맞물려 광범위한 대중의 자발적인 투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 자발적인 투쟁은 민주화라고 하는 커다란 물줄기의 한가운데에 있었으면서도 전혀 통일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내지 못한 채 고립, 분산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 대중들의 자발적인 투쟁이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민주화를 가로막는 반민주 세력들을 척결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의 힘으로 단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결은 노동 대중을 지도할 올바른 사상 이론의 정립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까지 우리 운동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던 주체 사상이 이러한 올바른 사상 이론의 정립을 통한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를 비판하고 대신할 올바른 과학적 대안의 부재 역시 이런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에 우리는 잘못된 주체 사상을 비판하고 이를 대신할 올바른 과학적 노선을 제시하여 노동 대중의 통일된 깃발을 마련하고자 노동 계급을 발간하였습니다.

“강령 초안” 작성 취지

앞서 “노동 계급”의 발간 취지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 활동의 주요한 목표는 노동자 계급의 통일을 이루는데 기여코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강령을 작성한 주요 이유이기도 한데, 이는 우리가 강령 앞에 덧붙인 편집자 주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운동과 노동자 계급의 통일적 대열을 구축하는 데 기여코자

“우리는 감히 남한의 노동자 계급 앞에 우리의 강령 초안을 내놓는다... 우리가 내놓는 이 초안이 완전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운동의 통일적 대열을 구축하는 데 매개가 될 수 있다면, 그 초안 전체가 폐기된다고 해도 우리의 노력이 그저 헛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바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작성한 ‘강령 초안’은 남한 사회에 있어서 혁명적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정치적 목표를 일반화하여 선언한 것으로서, 우리 그룹의 독자적 강령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 계급의 강령을 지향하는 우리 그룹의 정치적 의사 표현입니다. 노동자 계급의 강령은 몇 사람의 협의를 거쳐 확립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우리의 강령 초안을 기초적 형태로서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비판과 동의를 촉구, 노동자 계급의 통일을 이루는 데 기여코자 한 것입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란 말을 통해서 판사님이나 검사님 또는 여기와 제신 다른 분들이 떠올리는 건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1930년대 말에 스탈린에 의해 자행된 파의 숙청을 떠올리는



잘못된 주체 사상을 비판하고 올바른 과학적 노선을 제시하여 노동 대중의 통일된 깃발을 마련코자

왜곡된
반공 의식에 따른
연상법
프롤레타리아
독재=피의 숙청?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킬링필드 캄보디아에서 폴포트에 의해 자행된 만행을 떠올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저 역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 반공 선전에서 배운 연상법입니다. 그리고 보면 어떤 의미에서 그 같은 현상은 자연스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걸음만 더 나가면 그 같은 현상의 자연스러움은 곧 흔들리고 맙니다. 스탈린은 1936년의 “사회주의 헌법”에서 이미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종식을 선언한 이후에 피의 숙청도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폴포트의 만행을 비난하고 그를 권좌에서 몰아낸 현 캄보디아의 행삼린 정권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이름으로 폴포트의 만행을 비판했으며 폴포트를 몰아내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무엇인지에 대해 재고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재를 그것과 반대된다고 흔히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관련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르크스나 레닌의 경우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레닌의 말대로 민주주의란 일단 “다수에 대한 소수의 복종” 또는 “다수자의 의지에 소수자가 복종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다수결의 원리”가 민주주의의 상징인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좀더 일반화한다면 민주주의란 일부 사람들의 의지에 다른 일부 사람들의 의지가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독재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독재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를 부르조아 민주주의라고 특징지을 때 분명히 드러납니다. 부르조아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대한 복종을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그 외형적 특징으로 하고 있어서 그 역시 다수자의 의지에 소수자가 복종하는 제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선거라도 한번 유심히 관찰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구성되는 정부나 의회가 진정으로 다수자를 대표하는지에 대해 당장 의문을 갖게 합니다.

보통 노동자라면 선거 자금은 커녕 입후보 기탁금조차 없어서 대표가 될 수 있는 길은 이미 원천 봉쇄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은 대다수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라 노동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법으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다수인 노동자들의 이익을 표현한다고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던 토지 공개념이니 금융 실명제니 하는 것이 과연 다수자의 이익을 위해 휴지조각으로 되었다고 보는 사람 역시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대다수 민중이 자신의 대표로 뽑고 싶어도 그럴 대상은 이미 현행 국가보안법 등으로 조직화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그나마 활동 역시 수없이 많은 법과 돈으로 인해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어떤 절차로 구성되었거나 부르조아 민주주의는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 계급의 부르조아에 의한 부르조아를 위한 독재, 즉 부르조아 독재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현재 한국의 체제는 일부 독점적 부르조아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민중이 복종하고 지배받아야 하는 독점 자본가 계급의 독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노동자와 민중을 위해 그에 반대하는 소수자의 복종을 조직화하는 제도이고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와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그것은 프롤레타리아만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민중의 이익을 프롤레타리아가 지도하여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민주주의의 말 그대로의 의미인 “다수자의 의지에 소수자가 복종하는 제도”입니다. 그것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인 것은 그러한 민주

부르조아 민주주의는
사실상
다수인 노동자의
이익 옹호가 아니라
독점적 부르조아의
독재를 표현하는
것이다.

현재
남한의 체제는
부르조아의 이익에
민중의 이익을
복종케 하는
독점 자본가 계급의
독재이다.

프롤레타리아 주의에 반대하는 소수자의 복종을 조직화해내지 않고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다수자의 민주주의적 제도를 소수자의 반대와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독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얼마전에 엠비시 텔레비전에서는 “산디아고에 내리는 비”라는 영화를 방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칠레의 아옌데 정권이 칠레의 독점 부르조아와 미국, 그리고 피노체트의 군부에 의해 깨져가는 상황을 사실적으로 그린 것입니다.

아옌데는 다 아시다시피 선거를 통해 집권하였고, 모든 민중의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는 진정한 다수의 민주주의를 이룩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배제되는 어떠한 소수자도 없게 하려고 했습니다. 독점 부르조아도 심지어 경찰과 군부의 부르조아적 권리조차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칠레의 독점 부르조아는 미국 중앙정보부(CIA)와 손잡고 파업을 유도하고 폐업하기 시작했으며 상인들을 매수하여 철수를 유도해 냈습니다. 군부의 반동적 움직임을 지원하여 피노체트의 쿠데타를 조직해냈습니다. 예전의 경찰, 정보 기관, 행정 기관, 군부의 고위 관리들은 모두 이의 민주주의를 지지한 게 아니라 오직 자신들만의 민주주의를 위해 독점 부르조아지와 하나가 되어 폐업하고 쿠데타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이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아옌데 정부는 붕괴되고 아옌데는 피노체트의 총에 맞아 다수자의 민주주의와 함께 타계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칠레의 상황에서 말 그대로 다수자의 이익, 다수자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였을까요.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분명합니다. 다수자의 의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독점 부르조아지와 군부의 권리를 제한하고 민중의 이익 실현을 위해 개편하는 것 바로 그것이 최소한의 제한으로 최소

다수자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칠레의 아옌데 정권은 미국 중앙 정보부와 칠레 독점 부르조아지의 총에 쓰러졌습니다.

반동적인 독점 부르조아지와 군부의 권리를 제한해야 했던 것입니다.

의 희생을 통해 다수의 불행을 막고 다수자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피노체트의 반동 쿠데타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그 증오스런 폭력과 소수자의 독재를 지상에서 제거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바로 이런 문제 의식 속에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다수자의 민주주의를 위해 그에 반대하는 소수자의 복종을 조직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무고한 피를 일상적이게 하는 단어가 아니라 무고한 피를 막기 위한 이론이며, 민주주의의 뒷면이며, 선거나 평화와 반대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 민중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관해 언급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였습니다.

다수의 불행을 막고 무고한 죄를 예방하고 평화를 위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필요한 것입니다.

전위 정당은 왜 필요하며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먼저 왜 우리에게 “당”이라는 것이 요구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87년 7·8월의 노동자 대파업 투쟁은 그간 자본가들의 혹독한 착취와 정부의 가혹한 탄압과 선전 공세에 밀려 수십 년간을 노예와 같이 살아야 했던 우리 노동자들이 마침내 스스로의 힘을 자각하고 정부와 독점 자본가에 대한 투쟁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는 점에서 우리 현대사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갖는 사건이었습니다. 울산에서 시작하여 노도와 같은 불길로 전국을 휩쓴 대파업은 당황한 정부와 독점 자본가들의 온갖 탄압과 회유 속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 노조 건설이라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정부와 독점 자본가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온갖 불법적인 폭력과 테러에 맞서 싸우고 인간적인 권리를

87년 7·8월 노동자 투쟁은 정부와 독점 자본가에 대한 투쟁을 시작한 획기적인 시기였습니다.

노동자들의 쟁취하기 위해 그리고 민주 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민주 노조 활동과 정당한 요구를 정부와 자본가들은 "공권력"이라는 폭력과 테러로 막았습니다.

정부의 폭력과 탄압 속에서 노동자들은 이제 자본가만이 아니라 국가 권력과 대결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독점 재벌과 정부의 탄압에 맞서 정치적으로 싸울 수 있는 단결력, 곧 "당"이 필요합니다.

단위 공장을 넘어 지역적으로 단결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 보장과 민주적 노조 건설을 요구하며 투쟁해 온 이들에 대한 정부와 자본가들의 대답은 "공권력"이라는 폭력과 탄압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테러와 탄압은 전노협 건설을 전후하여 극에 달해 수 많은 구속 노동자가 생기게 되었고 그 결과 각 지역과 전국 노동자의 중심인 지노협과 전노협은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임금 인상과 노조 건설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도 정부와 독점 자본가들은 공권력이란 무력을 동원하여 짓밟았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최소한의 경제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도 단위 공장의 자본가뿐만 아니라 국가와 대결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는 노동자를 비롯한 다수 민중의 이해에 대립되는 소수 독점 자본의 지배를 국가 권력이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최근 금융 실명제나 토지 공개념이 독점 재벌들의 압력으로 무산되고, 이들 재벌들의 투기로 일어난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문제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미루어 임금 인상을 한 자리로 억제하고, 합법적인 파업 현상에도 공권력을 투입하는 우리의 현실이 잘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독점 재벌과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부의 경우 전국적으로 조직된 군과 경찰 병력 등 엄청난 물리력과 조직력, 자금력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데 비해 이에 맞서는 노동자에게는 돈도 무기도 주어져 있지 않은 맨손입니다. 강철로 둘러싸인 패퍼포그와 다연발 최루탄 발사기 앞의 돌이나 화염병을 "무기"라고 부르기에 너무도 빈약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압도적인 물리력의 차로 노동자들이 무참하게 진압되어도 이를 가지고 노동자의 의사를 대변하여 정치적으로 싸울 수

있는 노동자 정당 하나 없는 형편입니다.

노동자들이 이들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싸움에서 유일한 무기는 바로 노동자들의 "단결"뿐입니다.

그리고 이 "단결"의 최고 형태가 바로 "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했던 "당의 건설"이란 바로 전국적 규모의 노동자의 단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자를 비롯한 다수 민중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1천만 노동자가 하나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일본을 포함해서 거의 전세계에서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당, 혹은 사회당, 심지어는 공산당조차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군사적 대치 상태 속의 분단 국가였던 서독에서도 역시 노동자 계급의 사상인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회 민주당이 내각에까지 진출하여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독점 자본가들의 독재 국가인 우리 나라에서만 유독 이들 진보적인 사상이나 조직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이 횡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동자의 단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단결을 이룰 수 있는 당의 건설은 비공개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의 지역 노조 협의회나 전국 노조 협의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노조에 대해서까지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탄압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치 활동을 지향하는 노동자의 조직이 무사하리라는, 이만큼 허망한 기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의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비공개적인 노동자의 정당 건설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건설"이란 민중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1천만 노동자가 하나가 됨을 의미합니다.

진보적인 사상이나 조직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이 횡횡하는 이 때문에 이러한 단결을 이룰 수 있는 당의 건설은 비공개적이어야 합니다.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이유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통일은 남북한 민족 전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직한 방향·체제로 동질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내용은 민중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철폐되고 민주주의적인 권리가 전면 보장되어 완전한 민주주의, 다수자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 모두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남한은 신신국독자 체제가 민중 민주주의 사회로 변화되어야 하며 북한은 일인 중심의 독재 체제가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통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은 먼저 남한이 다수자의 민주주의, 민중 민주주의 사회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될 때에야 북한을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힘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한내에서도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전두환 씨나 노태우 씨의 요구를 북한이 들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남한 다수 민중이 지지하는 민중 민주주의 정권의 요구는 북한이 쉽게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북한 모두의 변화를 전제로 한 연방제 통일이 가장 바람직한 통일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한 모두의 변화를 전제로 한 연방제 통일이 가장 바람직하다.

III 억압과 착취 없는 새로운 사회를 향하여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에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는 그것의 신성함에 의하여, 입법은 그것의 엄숙함에 의하여 흔히 비판을 회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것들은 당연히 자신에 대한 의혹을 자초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성이 자유롭고 공정한 비판과 검증을 견디어 내는 것에게만 허용하는 참다운 존경을 요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세계적인 대철인답게 그는 예리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진리나 진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양심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부정하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이 법정에서 한 사람의 과학자로서 섰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해 냉정하게 그 본질을 통찰해 내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진실로써 그것을 설명하며 그에 대한 올바른 변혁의 상을 제시하는 것, 그것은 제가 철이 나고 나서, 그래서 세상이 어떤 건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금이나마



갈릴레이에 대한 판결에서 지동설의 진리성 여부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듯이, 우리 주장의 진리성 여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지배 계급 통치의 부당성을 입증하려 했다는 것만이 문제일 뿐, 알게 된 이후에는 일관되게 간직해 왔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글이나 행위의 진실성 여부, 진리성 여부, 나아가 도덕성 여부에 관한 한 저는 어느 누구를 상대로 어떤 경우에도 말할 수 있는 자긍심과 확신을 가지고 제 생각을 말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법정에서 서서 저 같은 과학자는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새로이 숙고를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는 진실됨이나 진리성 여부가 아니라 단지 어떤 글이나 사상, 이론 또는 정치적 행위의 기능만이 문제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진리나 진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양심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부정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것은 오히려 인간의 보편적 가치로서 추켜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나 그것을 추구하는 행위가 기성의 가치 체계, 즉 기존 지배 계급의 가치 체계와 모순되게 되고, 그에 따라 기존의 지배 계급의 가치 체계를 유지하는 기술과 충돌하게 될 때 조금전까지 지고의 보편적 선을 표현하는 듯 간주되던 진리성 여부는 어느새 혼란을 야기하는 사회악으로서 평가되고 마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는 사실 유명한 갈릴레이의 재판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것이기도 합니다. 갈릴레이에 대한 판결에서 지구가 도는가의 진리성 여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거기서 문제가 된 것은 그의 주장이 기존 지배 계급의 가치 체계인 종교적 세계관을 뒤흔드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신식국독자니 민중 민주주의니 하는 우리의 주장이 옳은가 여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기존 지배 계급의 통치를 부정하고 그 통치의 부당성을 입증하려 했다는 것만이 판단의 기준일 것입니다. 이는 진실이나 진리에 대한 판단이 서로 상반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의 근거에는 진실이나 진리됨

여부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가치 체계를 강요하고 유지하려는 지배 계급의 이익과 반대로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올바른 변혁의 상을 만들려는 민중의 이익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진실, 진리가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능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오기 이전에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사는 진실, 진리으로써 유지 발전되는 사회란 바로 그것을 지키고 고수하려는 투쟁에 의해 확보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바로 우리가 이 법정에서도 고수하려고 했던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도로 우리는 그동안 신식국독자론과 민중 민주주의에 대해 진술하게 진술하였습니다. 더불어 북한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노동자 계급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에 대해서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재론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언급되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주장했다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후자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주장했는가

이에 대해 저는 만일 그 사회주의란 말이 반공 이데올로기의 쇠창살 속에 갇힌 채 냉전의 오락줄로 퐁퐁 묶여진, 그래서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거나 생각하기도 이전에 폴포트의 킬링필드나 조지 오웰의 1984년을 떠올리는 말이라면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용례에서처럼 노동자 계급이 더이상 착취당하지 않으며 자신이 노동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 독점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민중의 이익을 위해



사회주의!
그것은
우리 노동자 계급과
민중이
전망으로서
간직하고 있는
자랑스런 이름입니다.

서 투자와 생산,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것은 좌경·용공이란 비난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계급과 민중이 해방된 사회의 상으로서 간직하고 있는 자랑스런 이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주의를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자본주의란 자본가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며 소수의 이윤을 위해 전 사회의 모든 인간적 가치가 유린되는 사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자들, 특히 독점 자본가들은 생산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더 적은 임금을 주어도 되길 기원하며 그것을 위해 폭력의 사용도 불사합니다. 반면 잔업·특근·조출·철야, 잠시도 쉬지 않고 손을 돌려 기계를 돌리고 공장을 움직이기를 요구합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는 최소 생계 비조차 지불하지 않으면서 쉴새없이 돌려대는 공장의 기계 소리에 묻혀 버리고 그 요구를 그저 이윤을 감소시킬 뿐인 비용의 증가로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자본의 논리에 의해 냉정하게 분쇄되어 버리고 맙니다. 먹기 위해 사는 것으로 전도되어 버리고만 노동자의 삶은 이어 계승되고,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계속됩니다.

오후 네다섯시면 느긋하게 퇴근해서 카페에도 가고 가족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동유럽권 노동자들의 생활은, 동아 일보나 중앙 일보 등 권위 있는 신문에 보도되어도 우리에게 별로 믿기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세계 최대의 주당 노동 시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극단적으로 탄압하기 때문에 세계 노동 기구에 가입조차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나라에선 하루 종일 강제 노동이나 하는 줄만 알고 있는 순진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에게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처럼만 보입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삶의 근저에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모든

생산이 이윤을 위해서만 행해지는 생산 관계가 아닌가 합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다른 모든 사회암적 요인들도 모두 이윤을 위한 생산에서 연원합니다. 지난 28, 29일에는 독점 재벌의 투기를 막고자 제정하려던 “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여신 운용 법안”, “토지 기본법안”이 재벌의 로비에 의해 국무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사회적 암이라는 것과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몇 번의 투기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투기는 계속 성행하고 있으며 그걸 막으려는 선량한 법조차 부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투자가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 행해지는 사회, 그런 사회에서 어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그걸 제한하려는 조치나 법이 그 엄청난 이윤을 위해 필사적으로 로비를 해대는 돈 앞에서 그렇게 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걸 냉정하고 철저하게 막으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자본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토지 공개념 등에 대한 비판의 논리가 언제나 사유 재산권의 침해 등으로 대변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주택 문제 역시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 공해와 환경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윤을 생각하는 자본가들에게는 어떠한 기대 자체가 이미 무리인지 모릅니다. 매일 평균 6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는 산업 재해 문제도 그렇습니다. 안정 장치에 드는 비용을 거절하는 건 물론, 더 빠른 작업과 이윤을 쫓아가는 냉혹한 자본의 논리입니다. 모든 것이 “보다 많은 이윤을!”이란 모토하에 행해지는 사회에선 인간의 몸뚱이도 이윤에 팔려다니게 되고 인간성과 도덕도 이윤 앞에서는 굴복하고 맙니다. 마약, 매춘, 강도, 인신 매매는 이런 경우의 극단적인 예일 뿐입니다. 이윤을 위한 자본의 경쟁은 급기야 인간의 성적 자극을 모든 매체를 동원해 흘러넘치게 하고 향락과 퇴폐로 뒤덮인 소비자를 창출해 냅니다. 인류이니

사회적 암인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법안도
독점 자본가들의
로비 앞에서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더 많은 이윤을!”
이라는 모토하에
행해지는 사회에서는
인간의 몸뚱이도,
인간성도, 도덕도,
이윤 앞에서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
그것은
소수의 이윤을 위해
전사회
의 모든 인간적 가치가
유린되는 사회입니다.

자본가들에게는
인간답게 살겠다는
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는
자본가에게는
이윤을 감소시키는
비용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도덕이니 하는 말들은 고리타분한 것으로 되어 버리고 부패와 향락을 찬송하는 ‘새로운 사고’가 지배권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중 어떤 것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하려고 하는 순간 사적 소유권, 영업권의 침해라는 비난에 부딪치게 되고 사적 이익의 반항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어느것 하나도 시원스럽게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잡겠다고 투기는 그물이 될 법들을 벌써 포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금융 실명제, 토지 공개념, 부동산 거래 등기의 문제는 자본주의의 영업권과 사유권 침해라고 하여 슬며시 포기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회암적 요소를 철저히 제거려고만 한다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허나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재벌들의 로비를 원천 봉쇄해야 하고, 그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 행하는 조치에 대해 근본적인 제한을 가해야 하며, 사적인 이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사회의 각종 암적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선 이윤을 위해 모든 것이 생산되고 행해지는 사회 제도 그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양으로든 또는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그로 인해 잃어야 했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하여 우리는 제도의 근본적 변혁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용례에 따라 우리는 그러한 근본적 변혁의 상을 사회주의라고 부릅니다.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사회주의는 투기나 산업 재해, 공해, 각종 폭력과 범죄, 독점체의 횡포에 반대하여 노동자 계급과 전민중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주의라는 이름에 대해 어떠한 비난과 욕설을 퍼붓더라도 결코 변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에서 사회주의는 노동자 계급의 사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의 각종 암적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이윤을 위해 생산되고 행해지는 사회 제도 그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자유’와 ‘민주’를 단죄하는 ‘자유 민주주의’

그렇다면 국가 보안법으로 우리를 단죄하는 것은 가능한 일인가.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국가 보안법은 북한을 상대로 하고 있는 법인가, 아니면 노동자 계급과 민중을 상대로 하고 있는 법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국가 보안법이 노동자 계급과 민중의 이익을 제한하고 그들의 정치적 자유를 탄압하기 위한 법이라면 그 법의 부당성은 재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경우 그러한 반민중적인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것은 민중과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랑스레 간직할 명예로운 훈장일 것입니다. 만약 그 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북한을 상대로 한 것이라면 우선 그 법은 현재의 국제 정세, 남북 관계 속에서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더불어 그것의 폐기 여부와도 무관하게 북한에 대해 동의한 바 없으며 반대로 냉정하게 비판한 우리를 처벌할 근거는 전혀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국가 보안법을 근거로 우리를 단죄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 역시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했다는 교묘한 고리를 끼워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한다 함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리는 자유를 주장했으며 그리고 그것을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는가.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민주주의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의 더 많은 민주주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링컨의 말대로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민중의 민주주

노동자 계급과 민중을 상대로 하는 ‘국가 보안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것은 우리에게 자랑스런 훈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면 그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와도 ‘민주주의’와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일 겁니다.



의"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이상은 이제까지의 진술에서도 거듭 확인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자유나 민주주의를 부정하기는 커녕 그것을 염원하여 온 우리가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했다고 한다면 뭔가 기묘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유도 민주주의도 부정하지 않고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기'란 하나의 심오한 수수께끼 같지 않은가요? 여기서 '자유도 민주주의도 부정하지 않고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기'라는 이 기묘한 역설이 성립하려면 오직 하나의 경우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즉,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나 민주주의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그러한 명제가 성립될 때에만 이 수수께끼 같은 역설은 성립합니다.

자유와도 무관하고 민주주의와도 무관한 '자유 민주주의', 그것은 실상 이제까지 누차 보아왔던 것처럼 파시즘이 언제나 그 추한 얼굴을 가리우는 가면에 불과했습니다. 자유의 요구를 짓밟고 들어선 군사 독재의 소위 '자유 민주주의'. 일체의 자유와 권리, 민주주의에 대해 유보 조항을 달아 박정희에게 반납할 것을 강요한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인 유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자유와도 민주주의와도 인연이 먼 자유 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까. 자유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라면 즉, 자유나 민주주의와 무관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따위 자유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호하게 부정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부정으로 처벌받는다든가 역시 파시즘에 대한 투쟁이라고 역사 속에 명예롭게 기록될 것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이 법정에서 전제하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가 바로 이런 것이라면 남아 있는 힘을 다해 힘껏 비난을 퍼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세기 들어와서 인류가 맞닥뜨려야 했던 대부분의 비극의 참상은 파시즘과 타협하고 야합하는 데서 시작되었기

자유'와도
'민주주의'와도
전혀 관계가 없는
'자유 민주주의'
---이것은 파시즘이
그 추한 얼굴을
가리려는
가면일 뿐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했다는 이유로
단죄받아야 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때문입니다.

만약 이 법정에서 전제하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가 이 따위 거짓된 자유 민주주의가 아니라면, 즉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자유 민주주의라면, 자유 민주주의를 사사로운 개인의 파시즘적 야욕을 위해 강도질한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파시스트 일당일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글이나 생각으로서뿐만 아니라 폭력을 동원한 체제까지 이용해서 자유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부정해 온 자들입니다. 박정희가 그랬고 전두환이 그랬습니다. 예전에 히틀러와 뭇솔리니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해 온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단죄될 수가 없습니다. 파시즘의 자유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 민주주의라면, 적어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에 적합한 민주적 권리를 선택할 자유는 보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헌법조차도 우리의 활동에 대한 법적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직 활동이나 집필 활동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학문, 사상, 양심, 출판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에 기초한 것입니다. 더구나 집필된 글은 학계에서도 공인된 이론입니다. 그에 대해 터무니없는 시대 착오적 단서를 달아 탄압하는 것, 그것은 도대체 어떠한 자유 민주주의를 전제하는 것입니까. 자유와도 민주주의와도 무관한, 자유 없는 자유 민주주의, 민주주의 없는 자유 민주주의입니까. 아니면 선택 가능성이 보장된 말 그대로의 자유 민주주의입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데 대해 이견을 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러한 자리에서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가 수호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파시즘의 추잡한 얼굴을 가려줄 뿐인 자유도 민주주의도 없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진정 대다수 국민인 민중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참된 의미에서의 자유 민주주의여야 할 것이라고

'자유'와도
'민주주의'와도
무관한
'자유 민주주의'라면
우리는
단호히 그것을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처벌받는다든가
명예로서
기록될 것이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파시스트들이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는 죄목으로 법에 따라 엄격하고 냉정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을 고대합니다. 그러한 현명한 판결이 재판정에 가득 올려 퍼질 때 우리 이름으로 단죄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 계급과 민중은 역사의 대로를 따라 어떠한 억압과 착취도 사라진 새 사회를 향하여 힘차게 진군하게 될 것입니다.

민족 통일 민주주의 노동자 동맹
(삼민 동맹)



혁명, 그 필연적 승리를 향하여

- I 노동자의 깃발(김진국 : 병합 심리 요청서 중에서)
- II 우리들은 과학적 사회주의의 창조자이며
실천자입니다(김태진 : 모두 진술)